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낙동강네트워크

### 보도자료

일 자	2021. 3. 17	담당자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406-2320)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010-8997-365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 MB 청와대·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불법 사찰·공작 박형준을 고발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 오후 14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앞
- 내용 :
  - 1) 여는말
  - 2) 고발장 요약 취지 설명
  - 3) 기자회견문 낭독

※ 불임자료1\_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시민사회(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 운동경과

※ 불임자료2\_ 박형준 예비후보 고발 개요

※ 불임자료3\_ 기자회견문

※ 문의\_ 정규석 010-3406-2320/ 김남주 010-8997-3653

- 지난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8개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 8개 문건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민간인들에 대해 MB 정부의 국정원이 자행했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의 증거들임. 이 중 두건은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명기된 문건임.
- 하지만 현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2021년 3월 17일(수)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형준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함. 이는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사찰에 대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임.

2021년 3월 17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낙동강네트워크

※ **붙임자료1**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시민사회(내외나라파일시민행동) 운동경과

- ▶ 2017. 10. 24. 내나라 시민행동은 정보공개청구 운동 돌입 기자회견
- ▶ 2017. 11. 9.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정보 공개 청구서 1차 접수(정보공개청구 550명, 개인정보열람요구 533명) (갑 제1호증의 1, 2)
  - 참여한 주요 인사 및 단체
    - ▷ 단체 : 민주노총 및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 전교조,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 ▷ 종교예술계 : 함세웅 신부, 명진(본명 한기중) 스님, 정지영 감독, 원고 박재동 화백
    - ▷ 자치단체장 : 원고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 ▷ 시민활동가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 ▶ 2017. 12. 8. 2차 청구서 접수(정보공개청구 366명, 개인정보열람요구 343명)
- ▶ 2017. 12. 12. 국가정보원이 1차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통보과 개인정보열람요구거부결정 통보함
- ▶ 2017. 12. 26. 1차 청구 거부에 대해 내나라 시민행동 이의신청
- ▶ 2018. 1. 8. 2차 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 통보(거부 이유: 1차 청구에 대한 거부와 같은 이유)
- ▶ 2018. 1. 11. 내나라 시민행동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비공개 면담
- ▶ 2018. 1. 15.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보
- ▶ 2018. 4. 11.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접수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345 원고 광노현(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전 한예종 교수, 화백)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406 원고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 김인국 신부(전 정의구현사제단대표신부)
- ▶ 2019. 8. 16.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 : 정보 전부공개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345 원고 광노현(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전 한예종 교수, 화백)
- ▶ 2019. 9. 5.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406 원고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 김인국 신부(전 정의구현사제단대표신부)
- ▶ 2019. 11. 12.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 2019. 12. 3. 국가정보원이 명진스님에 관한 정보 공개
- ▶ 2020. 7. 3. 서울고등법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
  - 서울고등법원 2019누58072 원고 광노현, 박재동(개인정보 등 제외한 나머지 공개)
- ▶ 2020. 11. 12.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국가정보원 상고 기각)
  - 대법원 2020두45018 원고 광노현, 박재동
- ▶ 2020. 11. 18. 국정원, 광노현, 박재동에 관한 정보 공개
- ▶ 2020. 12. 7., 8. 문성근 등 18명,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
- ▶ 2021. 1. 16. 국정원, 문성근 등 12명에 일부 정보공개(63건) 일부 비공개 일부 보완요구, 6명에 정보 청구외 통지(보완요구 또는 부존재)
  - 비공개정보 :
    - 공개 문건 중 삭제 부분 :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사항 및 제3자 개인에 관한 사항
    - 개별 비공개정보 : 주간 지자체장 특이동향 문건(이재명, 배진교), 제목불명 문건(문성근), 특명 공작 수행 관련 정보(공작계획, 공작수행, 공작결과보고 등 포함)'(이덕우),
  - 보완요구
- ▶ 2021. 1. 20. 문성근 등 12명에 정보공개 문건 도달, 6명 정보 부존재 또는 보완 요청
- ▶ 2021. 2. 1.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청구(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
- ▶ 2021. 3. 9. 환경운동연합 등 5개 4대강사업반대 환경단체에게 문건 8건 111쪽 공개

※ 불임자료2 박형준 예비후보 고발 개요

1.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는 2021. 3. 17.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이하 ‘박형준 예비후보’)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 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다.

2.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 국정원 2017. 6. 19.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족
- 국정원 2017. 9. 25. “정치인, 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결과 발표 :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 사실 일부 드러남
- 광노현 전 교육감, 박재동 화백 등 2018. 4. 11. 국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국정원 2018. 3. 환경부에 4대강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내역 회신
- KBS 2018. 7. 4. 국정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내역 문건 보도
- 광노현 전 교육감,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국정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20. 11. 12. 국정원의 불법사찰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 확정
- 녹색연합, 생태지평 등 5개 단체 2021. 2. 1. 국정원 상대로 4대강사업 반대 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국정원은 2020. 11.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8개 문건을 상당부분 가림처리한 채 공개

2. 박형준 예비후보가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요청하고 배포 및 보고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 문건 및 국정원 회신에 기재되어 있다.

\* 6.26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

‘4大江 사업’ 贊反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2009. 7. 1

‘4大江 살리기 사업’ 관련 찬성·반대단체 현황을 점검하고, 찬성단체 육성 및 반대단체 견제를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

※ 불 임 : ‘4大江 사업’ 贊反단체 및 주도인물 현황

※ 배 포 : 홍보기획관

\* 7.8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

‘4大江 사업’ 主要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2009. 7. 16

‘4大江 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환경·종교단체 등의 주요인물 20명에 대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을 검토했음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연번	주요 내용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
1	(2008.12월) 환경.지역.시민.종교.학계 등 분야별 16개 반대단체를 선정, △이념 편향성 공개를 통한 비판여론 조성 △보수 환경단체 지원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책 제언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보고
2	(2009.1월) 반대단체끼리 연대 방해를 위해 △환경(보조금 유용 등 일탈사례 발굴,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 △종교(좌파.과거성향 부각, 국책사업 차질 사례 홍보) △언론(지역 찬성여론 홍보) 등 대응전략 제시 청와대(정무.민정.국정기획수석) 보고
3	(2009.1월) 4대강 사업 반대가 예상되는 3개 단체의 △한미 FTA 체결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국정발목잡기 사례를 종합하고, 환경단체 핵심인물(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를 수집 청와대(민정수석) 보고
4	(2009.7월) 반대단체(8개) 견제 방안으로 △불법활동 채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등을 제시하는 한편, 찬성단체(3개) 강화 방안으로 △정부 유관기관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 △홍보 활동비 지원 등을 제시 청와대(홍보기획관) 보고
5	(2009.7월) 사회.환경.종교단체 등 주요 반대인물 20명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친분인사를 ‘1:1 전담관’으로 지정, △투쟁계획 사전 파악 △내부 갈등 유도 등 간접관리라인을 구축하는 ‘전담관 매칭 방안’ 수립 청와대(홍보기획관) 보고
6	(2010.3월) 20개 찬성단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 △정부행사 시 핵심인사 초청.격려 △보수 언론을 통한 활동상 부각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언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보고
7	(2010.3월)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 △친환경 생태복원 △수질 개선 △지역주민 혜택 △문화유산 창조 △국민의 삶 향상 △적법절차 준수 등 취지의 설득.홍보 논리 작성 청와대(정무.민정.국정기획수석) 보고
8	(2010.3월) 청와대 요청에 따라 종교계 각 종단별 반대 주도단체(8개) 현황 및 핵심인물(10명)의 주요 반대 활동을 파악, △종단 고위층에 대한 설득 확대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규탄집회 개최 △개인비리 언론보도 추진 등 대응방안 제시
9	(2010.6월) 학계 내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 △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교원 평가실태 점검 △국고지원금,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 △보수 언론을 통한 인기 영합적 일탈행위 보도 등 견제책 제언 청와대(대통령실장.민정.교문수석) 보고

3. 위 문건들 외에 박형준 예비후보가 국정원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요청 또는 지시하거나 관여하고 보고 받았다고 볼 만한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다.

○ 2017. 8. 10. 방송 JTBC 썰전에서 박형준 예비후보(당시 교수)는 청와대 재직 당시 “국정원에서 국내 관련 정보보고를 늘 받았다”는 발언을 하였다.

○ 2021. 3. 15. 김병기의원(민주당)은 국정원은 홍보기획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보고서를 생산해서 친전 문서로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하고, 특히 기밀을 요구하고 신원정보가 있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친전으로 보고하는 것에 예외가 없다고 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정부 및 박근혜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공작 보고체계에 따르면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에 대한 보고가 박형준 예비후보에게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박형준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

○ 박형준 예비후보가 여러 증거를 통해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요청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박형준 예비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및 공작 관련 문건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을 전혀 몰랐다” 등등 박형준 예비후보의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에 대한 요청과 보고 받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박형준 예비후보가 국민의 힘 선거대책본부 및 여러 언론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21. 2. 16. YTN 보도

2021. 3. 2.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 3. 10. KBS 뉴스 인터뷰

2021. 3. 10. MBC 김종배 시선집중

2021. 3. 11.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장 회의 발언

2021. 3. 14. MBN 시사스페셜

#### 5. 결론

박형준 예비후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으로서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지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공작정치를 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끝.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공작 주체 중 한명인 박형준을 고발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지난 3월15일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자행했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 문서 8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사찰·공작 문건의 요청 및 수신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장, 국가위기상황팀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 교문수석, 국정기획수석, 기획관리비서관, 총리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등 핵심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뇌부가 정보기원을 손발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선거에 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아 놓고선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에게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

2021년 3월 17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나라내파일시민행동/낙동강네트워크